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의 안	598
변 호	

발의연월일 : 2009. 11. 24.

발 의 자 : 오영세의원외 5인

1.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점포의 입점확대로 인해 지역의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권이 잠식되고, 그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여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3조)
- 나. 상생협력을 위한 필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4조)
- 다.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항들을 마련토록 함(안 제5조)
- 라. 시장이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사항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시장이 상생협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 다. 관련부서 협의 : 경제정책과, 법무통계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 협의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
4.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육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지역 생산품 및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유통업과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국장
3. 대형유통기업 대표
4. 중소유통기업 대표
5. 소상공인 대표
6. 전통시장 대표
7.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8. 그 밖에 유통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업무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 지원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및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과 공사발주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7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시장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대규모점포의 종류 등 <개정 2009.10.1>) ①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라 함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신설 2009.10.1> [전문개정 2006.6.22]

제5조의2 (대형 및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①법 제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형 유통기업(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중소기업 또는 납품업자간의 상호발전에 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6.2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3>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3.23>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9.10>

③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9.27]

찬성의원서명

[illegible]